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와 규제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부패화 현상을 예로 하여 -

Refeudalisierung von Internetgesellschaften und ihre juridischen Regulierungen

양 천 수(Yang, Chun Soo)*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möchte die folgende These aufstellen, dass das Phänomen der Refeudalisierung von Internetgesellschaften und damit die Problematik einer neuen sozialen Korruption in "Cyberspace" sichtbar sind. Um die These zu begründen, möchte der Autor das Thema der Refeudalisierung der Internetgesellschaften als soziale Korruption im Folgenden untersuchen.

Zunächst stellt die vorliegende Arbeit die Konzeption der "Zivilverfassung ohne Staat" von Gunther Teubner vor, in der er die positive Bedeutung von Internetgesellschaften sehr betont, um das kritische Potenzial der Internetgesellschaften festzustellen (II). Um das Phänomen der Refeudalisierung von Internetgesellschaften, die von Haus aus das kritische Potenzial haben sollten, theoretisch zu erklären, will sich die vorliegende Arbeit auf die These des "Strukturwandels der Öffentlichkeit" von Habermas berufen (III). Danach geht die vorliegende Arbeit kurz darauf ein, wie unsere Internetgesellschaften einen Strukturwandel erfahren hat (IV). Letztendlich wird die Frage beantwortet, ob ein solcher Strukturwandel von unseren Internetgesellschaften als eine soziale Korruption begriffen werden kann, und zugleich die Problematik der juridischen Regulierungen der Refeudalisierung der Internetgesellschaften behandelt (V).

Keywords: 인터넷 공동체(Internetgesellschaften),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Refeudalisierung von Internetgesellschaften), 공론영역(Öffentlichkeit), 공론영역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민사헌법(Zivilverfassung), 사회부패(soziale Korruption), 하버마스(Habermas), 토이브너(Teubner)

I. 문제제기

오늘날 인터넷 공간은 현실 공간 못지않은, 때로는 현실 공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얻기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이제는 진부한 감을 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세계 구석구석 뿌리를 내린 상태이다.¹⁾ 이제 인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터넷이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 주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유비쿼터스”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행동하는 데 지출해야 하는 일종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있다.²⁾ 그 만큼 시간이 줄어들고, 더욱 다양한 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측면에서 언급할 만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정보민주주의’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적인 인터넷 공론 영역’이 형성될 수 있었고, 이러한 공론영역에서 생산된 “의사소통권력”은 심지어 새로운 정치권력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³⁾ 인터넷을 통해 더욱 많은 참여자들이 ‘네티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 공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율적인 인터넷 공동체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한 ‘대화적 토론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⁴⁾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 새로움을 넘어 ‘일상적인 공간’으로 정착하면서, 우려할 만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인터넷 공동체를 주도하는 ‘네티즌’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의사소통권력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이른바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현상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령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지식검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사이트가 제공하는 ‘인기검색어’나 ‘인기 UCC’에 연연해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종합관리체계인 포털사이트가 자본과 권력이라는 매체에 일그러지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독점적인 인터넷 공간을 형성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는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
- 1) ‘정보화 사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는 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6, 275쪽 아래.
 - 2) ‘거래비용’ 개념에 대해서는 J. L. Harrison, 명순구 역,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77쪽 아래.
 - 3) ‘의사소통권력’ 개념은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2. Aufl., Frankfurt/M. 1994, S. 365.
 - 4) 하버마스의 ‘대화적 토론정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양천수, “대화적 민주주의론”, 『호원논집』 제8호(2000), 181-185쪽;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민주주의 이론적 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05; 엄순영,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 프란츠 노이만과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5 등 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방문, 광고비 담합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동안 서류검토와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업체로 파악됐으며, 콘텐츠제공 수수료율과 검색등록 심사료의 담합 여부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 ·)”⁵⁾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경제법,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한다)이 금지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⁶⁾ 이들을 조사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가 보여주는 문제는 법철학과 사회철학 혹은 부패학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심중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부패 현상이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부패 현상 때문에 인터넷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사회비판적인 힘이 사라지고, 대신 자본과 권력에 의해 인터넷 공동체가 ‘재봉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포털업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조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근 들어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인터넷 공동체가 재봉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사회부패 문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테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테제를 논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글을 진행시키려 한다. 우선 인터넷 공동체가 지닌 비판적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공동체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독일의 법사회학자 군터 토이브너(G. Teubner)의 주장을 소개하기로 한다(II). 그리고 이렇게 본래 비판적인 힘을 갖고 있던 인터넷 공동체가 재봉건화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공론영역의 재봉건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론을 원용한다(III).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공동체가 어떻게 ‘구조변동’을 겪어왔는지 간단하게 다룬다(IV).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변동’이 ‘사회부패’에 해당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사회부패’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를 어떻게 법으로써 규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V).

5) 2007.05.09 (수) 오후 3:33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김지훈·김세영 기자 작성).

6) 이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심재한, 『경제법강의』, 창원대학교 출판부, 2006, 10쪽 아래.

II.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동체 구상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동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상한 학자로서 독일의 법사회학자인 군터 토이브너(G. Teubner)를 거론할 수 있다. 가령 토이브너는 2001년에 기획한 “국가를 넘어서는 민사헌법 구상”에서 인터넷 공동체가 국가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헌법’(Verfassung)을 만들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토이브너의 시도는 본래 “초국가적 법다원주의”(transnationaler Rechtspluralismus)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토이브너는 “디지털헌법”(Digitalverfassung)을 예로 하여 인터넷 공동체가 자율적인 헌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비판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인터넷 공동체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군터 토이브너의 구상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토이브너는 2001년에 처음 기획한 “국가를 넘어서는 민사헌법 구상”에서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공동체를 선보인다.⁷⁾ 여기서 토이브너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일종의 디지털헌법(Digitalverfassung)을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결부하여, 이러한 민사헌법 구상을 제기한다. 즉 과연 인터넷(디지털) 영역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민사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곧 토이브너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화”(Digitalisierung), “민영화”(Privatisierung),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화”(globale Vernetzung)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그 의미를 갖는다.⁸⁾

그런데 토이브너는 이미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이에 적합한 “세계헌법”(Globalverfassung)을 만들려는 구상이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⁹⁾ 우선 미국의 헌법을 세계의 헌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나아가 독일의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회페(O. Höffe)처럼, 칸트(I. Kant)의 철학에 바탕을 두어 세계국가와 세계헌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세계국가와 세계헌법을 분리하여 세계국가 없는 세계헌법을 구상하는 시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국가 상호간에 형성된 단편적이면서 다원적인 정치질서에 바탕을 두어 다원적인 세계헌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토이브너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

7) 이 구상은 2001년에 처음 기획되었고, 2003년에 공간되었다. G. Teubner, Globale Zivilverfassungen: Alternativen zur staatszentrierten Verfassungstheorie, i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63 (2003). 여기서는 필자가 갖고 있는 논문 초고에 따라 인용하기로 한다.

8)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2.

9)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2-4.

도가 세계화 현상에 그리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국가를 넘어서는 그리고 각 사회적 부분체계가 각기 자율적으로 고유하게 정립할 수 있는 “민사헌법”(Zivilverfassung)을 구상한다.¹⁰⁾ “디지털헌법”이 이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된다고 한다.

물론 토이브너는 이러한 국가 없는 헌법이라는 구상이 공법학자에게는 꿈이나 유토피아로 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상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근거로서 토이브너는 “합리화 과정이 겪는 딜레마 현상”(Dilemma der Rationalisierung)을 지적한다.¹¹⁾ 즉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세계국가를 전제로 하고, 세계헌법을 구상하려고 하는 것은, 합리화 과정에 내재된 모순, 구체적으로 말해 세계화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다원주의화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로서 토이브너는 “탈중심화된 세계화”(Polyzentrische Globalisierung)을 제시한다.¹²⁾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서 토이브너는 “점진적인 헌법주의”(Creeping constitutionalism)를 말한다.¹³⁾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헌법을 거부하는 데 기초가 된다면, 마지막 근거는 오히려 각 부분체계에서 독자적인 헌법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토이브너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라는 그로티우스(H. Grotius)의 유명한 언명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점진적인 헌법주의가 인터넷 영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향에 근거를 두어, 토이브너는 다음과 같이 민사헌법을 구상한다.¹⁴⁾ 우선 민사헌법은 각 부분체계와 법이 “구조적으로 접합”(strukturelle Kopplung)될 수 있도록 짜야 한다. 나아가 이 민사헌법이 헌법규범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민사헌법 안에서 일종의 “규범서열화”(Normhierarchie)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헌법은 무엇보다도 “일차규범”과 “이차규범”이라는 “규범서열화”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¹⁵⁾ 즉 한편으로 민사헌법은 민사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일차규범”을 생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차규범”에 관한 “이차규범”, 달리 말해 “승인규범”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민사헌법에서는 기본권이 내용적인 규범통제를 담당한다. 이런 점에서 민사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헌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적인 통제수단을 끌어온다. 마지막으로 토이브너는 민사헌법이 “조직화된 영역”과 “자발적인 영역”으로 이원화된다고 한다(Dualverfassung von organisiertem und spontanem Bereich). 여기서 우리는 토이브너가 하버마스의 “대화적 토론 민주주의의 이

10)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4-6.

11)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6-9.

12)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9-11.

13)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11-14.

14) G. Teubner, 앞의 논문(주7), S. 15 ff.

15) 이러한 “규범서열화”는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L.A. Hart)에게서 비롯한다. 이에 관해서는 허버트 하트,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105쪽 아래.

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직화된 영역은 하버마스가 말한 “제도화된 공론영역”(institutionalisierte Öffentlichkeit)에 상응하고, “자발적인 영역”은 “제도화되지 않은 공론영역”(nicht institutionalisierte Öffentlichkeit)에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를 통해 토이브너는 민사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분석

이러한 토이브너의 민사헌법 구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인터넷 공동체는 기존의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규범을 생산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렇게 인터넷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인터넷 헌법인 디지털헌법을 제정할 때, 모든 인터넷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특히 “자발적인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인터넷 공동체에서 일종의 비판적인 토론정치를 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공동체는 - 비록 토이브너가 분명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 기존의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터넷 공동체가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토론 공동체로서, 사이버 공간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의 민주화까지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III.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및 재봉건화

1. 문제점

위 II.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 공동체는 자율적인 공동체로서 기존 제도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공동체는 이러한 자율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이버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사이버 문화’는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현대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문화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성장하고 뿌리내린 문화현상이다. 사이버 문화는 인터넷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가상공간(사이버 공간)에게 현실공간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 때문에 사이버 문화 속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독자적인 공간이자 공론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공동체가 생산하는 사이버 문화를 통해, ‘정보민주주의’는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토론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각종 토론이나 카페 문화 등은 이 점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인터넷 공동체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사이버 문화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즉 사이버 문화를 통해 공간적인 거리가 사라짐으로써, 동시에 각 참여자들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고¹⁶⁾, 더불어 합리적인 토론보다도 익명성을 무기로 한 상호비방이나 인격훼손과 같은 반토론문화 현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비판적인 잠재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터넷 공동체가 일종의 “구조변동”을 겪고 있다고나 할까? 앞 I.에서 소개한 신문기사는 이러한 “구조변동”을 예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터넷 공동체의 구조변동’ 테제가 타당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버마스가 분석하고 제안한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테제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2. 하버마스의 테제: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테제는 하버마스가 1962년에 처음 공간한 자신의 교수자격취득 논문인 『공론영역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에서 제시한 것이다.¹⁷⁾ 시민적 공론영역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밝히고, 이러한 시민적 공론영역이 그 후 어떤 구조변동을 거치는가를 치밀하게 밝힌 이 교수자격취득 논문에서,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공론영역의 비판적 역량이 희미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시민적 공론영역은, 그 후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팽창해 나가면서 “구조변동”을 겪게 된다. 이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¹⁸⁾ 정치적 측면에서 진행된다.¹⁹⁾ 먼저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사회·노동 운동이 등장하면서, 시민적 공론영역이 전제로 한 시민 개념이 확장되거나 붕괴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노동 운동에 대응하고자, 국가 구조가 자유주의적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적 공론영역이 전제로 했던 국가/사회 분리는 다시 와해된다. 다시 말해,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이 다시 교차되거나 혼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재봉건화”라고 칭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과거의 출판문화를 압도하는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민 혹은 대중

16) 이를 분석하는 이상돈·전현욱, “정보이용동의 -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 『고려법학』 제47호(2006), 87쪽 아래.

17) 여기서는 독일 주어캄프(Suhrkamp) 출판사가 1990년에 출간한 제18판에 따라 인용한다.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1990.

18) J. Habermas, 앞의 책(주17), S. 255 ff.

19) J. Habermas, 앞의 책(주17), S. 275 ff.

(Publikum)은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스미디어가 생산한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지위로 전락한다. 하버마스는 이 변화를 “문화를 논하는 대중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으로”(vom kulturräsonierenden zum kulturkonsumierenden Publikum)²⁰⁾라는 표어로 정리한다.

이에 따라 공론영역의 정치적 의미도 바뀌게 된다. 과거 공론영역은 시민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고, 이를 관리·왜곡하는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출현하면서, 공론영역의 의미는 왜곡된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공적 견해”(öffentliche Meinung)보다는 국가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생산된 공적 견해가 경험적으로 지배적인 것이 된다. 공적 견해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픽션 개념이 되어 버린다. 공론영역은 광고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하버마스는 이를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²¹⁾

3. 분석 및 적용

이렇게 젊은 시절의 하버마스가 분석하고 제안한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테제는 요즘 우리 인터넷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말하자면, 처음 사이버 문화를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주역이었던 인터넷 공동체가, 이제는 오히려 이미 생산된 사이버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거대 포털업체가 등장하고, 이들이 새로운 ‘인터넷 문화권력’으로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 문화를 좌지우지 하면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버마스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내놓은 “공론영역의 구조변동” 테제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출간한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의 비판적·규범적 차원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²²⁾ 이제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을 단순히 사회국가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 자율성이 작동하며, 의사소통적 권력이 생산되는 비판적인 마당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하버마스가 법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발맞추어 민주주의를 “대화원칙”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²³⁾

그렇다면 우리의 인터넷 공동체도 한편으로는 “재봉건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봉건화”를 극복하고, 다시 비판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일까? 다음 IV.에서는 먼저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테제’를 검증한 후, 그 다음 V.에서 인터넷 공동체가 비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0) J. Habermas, 앞의 책(주17), S. 30.

21) J. Habermas, 앞의 책(주17), S. 343 ff.

22) J. Habermas, 앞의 책(주3), S. 399 ff.

23) J. Habermas, 앞의 책(주3), S. 141.

IV. 인터넷 공동체의 구조변동

1. 인터넷 공동체의 발전과정

(1) 인터넷 공동체가 일종의 구조변동을 거쳐 재봉건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그간 우리 사회의 인터넷 공동체가 발전해온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 인터넷 공동체의 발전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엄밀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동원하여 얻은 결론은 아니다. 필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엄밀함의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칠게나마 그 동안 인터넷 공동체가 발전해온 과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를 통해 인터넷 공동체가 일종의 재봉건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2) 제1단계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막 PC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PC 통신 동우회가 구성되었다. 이 PC 통신은 인터넷과는 달리 폐쇄적인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적인 측면보다 사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보적 접근권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더 무게중심을 획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²⁴⁾

나아가 제2단계는 인터넷 공동체가 각종 사이트와 홈페이지로 이원화되는 단계라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업목적으로 형성된 각종 사이트나 공적인 사이트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공적 측면을 대변하는 사이트와 사적 측면을 대변하는 개인 홈페이지로 이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 홈페이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 때문에, 완전히 사적이지는 않았다. 개인 홈페이지 관리자가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방문자는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고, 또 관리자는 아무래도 방문횟수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어서,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개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아주 사적인 부분을 이러한 홈페이지에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 했다. 이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는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의 중간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제3단계는 카페와 클럽문화가 등장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제2단계로서 인터넷 공동체가 각종 사이트와 홈페이지로 이원화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개인 홈페이지와 대비되는 사이트는 상업목적을 추구하거나, 일정한 공공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각종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24) ‘정보적 접근권’에 대해서는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단락번호 [16]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참고.

있는 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한 게 각종 카페와 클럽이었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다음카페”나 “프리첼 클럽”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인터넷 공동체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가 생각한 공론영역에 가장 근접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 문화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음과 같은 내부모순을 겪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적·친목단체로 출발했던 카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수에 어느 정도 집착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카페가 ‘거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본래 카페가 추구했던 부분, 즉 자유롭게 사적인 관계를 도모한다는 구상이 장애를 겪게 된 것이다. 가령 카페가 소규모일 때는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고, 각종 토론도 할 수 있었는데, 회원이 증가하고, 또 친목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닌 참여자가 나타나면서, 더군다나 서로 상이한 평가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면서, 점차 카페 게시판이 ‘空洞化’되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쉽게 말해, 서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데 주저하게 된 것이다.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으로 자꾸 변해가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 하기 시작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광고글로 카페 게시판이 ‘식민지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던 듯 싶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페는 회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글 작성권한을 차등화하기도 했지만, 이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정회원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에 있는 것 같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4단계로서 비밀클럽과 각종 미니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인터넷 공동체로서 가령 실명제 클럽인 “싸이월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싸이월드는 실명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익명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다시 여기에 미니 홈페이지와 비밀클럽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적인 측면보다는 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 싶다. 가령 미니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개방정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일촌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사적인 의사소통에 더욱 강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싸이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²⁵⁾

25) 그러나 싸이월드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각종 예외가 존재하면서, 미니 홈페이지 공동체 역시 어느 정도 모순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아무래도 방문횟수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를 많이 공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면적인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일촌공개”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촌”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촌 자체가 많아지면서, 일촌 관계 그 자체가 사적인 관계에서 다소 공적인, 애매모호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모든 방문자에게 공개되는 방명록도 미니 홈페이지의 구조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방명록은 공론영역 개념에 걸맞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명록 자체가 생산적인 토론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로 무관한, 때로는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방문자들이 방명록에서 모이고, 또 이들과 관리자가 내면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서, 관리자의 내적 영역이 다수에게 공개되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비회원 역시 각 미니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음으로써, 미니 홈페이지의 사적

다음 제5단계로는 인터넷 토론문화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과, 개인 미니홈피 혹은 블로그가 이러한 토론장과 연결되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²⁶⁾ 이와 동시에 개인 토론자나 블로그 운영자들이 공적인 언론을 대변하는 인터넷 신문의 집필진으로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오마이 뉴스”는 비전문가 시민기자들의 글을 기사로 원용하고 있고, “인터넷 한겨레”의 경우도 개인 블로그 작성자를 기사 집필진으로 합류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마지막 제6단계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UCC’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 참여자인 네티즌은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만의 인터넷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UCC’ 현상은 ‘유비쿼터스’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요즘 인터넷 공동체가 보여주는 현상은, 토이브너가 구상한 그러한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공동체를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인터넷 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이렇게 인터넷 공동체가 변동해간 과정을 추적하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단순한 흥미위주의 동우회가 카페의 수준을 넘어서 자유로운 토론을 권장하고 추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공동체가 각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격이나 개인정보·명예가 보장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호승인’과 ‘상호인정’을 실현하려는 대화구조를 몇몇 인터넷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공동체의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와 모순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터넷 공동체가 몇몇 포털사이트의 주도 아래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당수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또는 UCC 클럽은 포털사이트가 마련한 인터넷 공간에서 운영된다. 그리고 이들 인터넷 공동체들은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들이 발표하는 각종 ‘검색어 순위’나 ‘UCC 순위’ 혹은 ‘오늘의 홈페이지’ 등에 민감해 한다. 말하자면, 이들 인터넷 공동체가 포털사이트에 종속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각종 지식생산을 포털사이트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검색’은 많은 네티즌들이 의존하는 지식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교육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⁷⁾ 요컨대, 점점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인 영역이 노출될 우려가 상존 하고 있다.

26) 가령 ‘다음’ 사이트의 경우에서 이러한 토론게시판과 블로그가 접합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7) 필자가 담당하는 강의를 토론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토론질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 지식검색을 이용한다는 것을, 강의하면서 경험하기도 하였다.

보였던 인터넷 공동체가, 오히려 자율성을 상실하고 거대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관리체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이와 모순되는 종속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면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미약한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이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는 인터넷 공간의 자율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요구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의 경우에 스폰서 광고를 확장하는 것, 더 나아가 - 요즘 혐의를 받고 있는 - 검색어 순위를 일정한 목적 아래 관리하는 것 등은,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이들을 재봉건화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V.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1. 사회부패로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포털업체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사실이라면, 따라서 위에서 분석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가 사실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이러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를 일종의 사회적 일탈행위, 즉 ‘사회부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사회부패로 볼 수 있는가?

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전에 ‘사회부패’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패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²⁸⁾, 여기서는 필자가 ‘절차적 정의론’에 바탕을 두어 제안한 ‘절차주의적 부패 개념’에 따라 사회부패를 확정하고자 한다.²⁹⁾ ‘절차주의적 부패 개념’에 따르면, 부패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부패란 정의 혹은 정의를 발견하는 데 기초가 되는 두 절차조건, 즉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토론을 가능케 하는 절차적 의무를 침해하는 사회적 일탈행위이다.”³⁰⁾

28) 이에 관해서는 김영중, 『부패학 - 원인과 대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참고.

29) ‘절차적 정의론’에 대한 개관은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적 정의”, 『법과 사회』 제5권 (1992), 213쪽 아래.

만약 부패 개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현상을 이러한 부패 개념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는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인터넷 포털업체와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 인터넷 포털업체와 포털 이용 네티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정보왜곡 행위.

이 두 유형 중에서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 공동체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토론공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비판적인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 전제로서 인터넷 공간에 관한 정보가 아무런 장애 없이 평등하게 모든 네티즌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업체가 각종 지식검색이나 인기검색어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면, 이는 인터넷 정보왜곡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조건’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³⁰⁾ 왜냐하면, 정보를 아무런 장애 없이 평등하게 모든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차주의적 부패 개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형도 간접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조건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포털업체와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 사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터넷 공간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본과 권력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종류 등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절차주의적 부패 개념’에 포함된다.

2. 법적 규제의 방향

이렇게 인터넷 포털업체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의 재봉건화가 일종의 사회부패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법으로써 규제해야 할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연구테마가 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다.³²⁾ 하지만 여기서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간단하

30) 양천수,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부패의 개념, 정당화 근거 및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제4호(2006. 12), 12쪽.

31) 이러한 참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Yang, *Konzeption einer intersubjektiven Rechtsgutslehre*, Diss. Frankfurt/M. 2006, Kapitel IV. 참고.

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우선 첫 번째 행위유형인 인터넷 포털업체와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써 규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포털업체가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에 대해 자행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사실이라면, 가령 “콘텐츠 제공업체와 맺은 각종 거래관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대금을 삭감 또는 지연해서 지급”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³⁾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과연 포털업체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2) 정보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는 인터넷 포털업체와 포털 이용 네티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정보왜곡 행위를 법으로써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인기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법으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왜곡 행위를 법으로써 규제한다는 것은, 네티즌을 마치 ‘행위무능력자’처럼 순진한 그래서 국가의 ‘후견’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왜곡 행위를 일종의 사회부패로 파악한 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법을 투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은, 다시 말해 ‘규제의 역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³⁴⁾ 더군다나 이는 네티즌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는 네티즌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넷 공동체의 구성원인 네티즌은, 이렇게 손쉽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티즌은 ‘실천이성’을 가진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인터넷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합리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체(Person)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³⁵⁾ 마치 오늘날 독일의 경제법이 ‘소비자’ 개념을 ‘합리적인 소비자’로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다.³⁶⁾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왜곡 행위에 대해 법

32) 이에 대해서는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단락번호 [2] “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참고.

33)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최진욱,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7 참고.

34)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는 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35) ‘합리적 대화’ 개념은 J. Habermas, 앞의 책(주3), S. 138.

36) 이에 대해서는 I. Saenger, 김규완 역, “도처에 소비자”, 『고려법학』 제46호(2006), 296쪽.

을 쉽게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티즌들이 각 인터넷 공간에서 형성되는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공론영역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비판하고 교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하버마스가 재봉건화되는 공론영역에 대해 다시 비판적인 힘을 부여한 것처럼,³⁷⁾ 각 포털업체에 의해 재봉건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에 대해 우리도 비판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컨대, 재봉건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를 구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비판적인 잠재력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종, 『부패학 - 원인과 대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 김영평 · 최병선 · 신도철 (편저),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심재한, 『경제법강의』, 창원대학교 출판부, 2006.
- 양천수, “대화적 민주주의론”, 『호원논집』 제8호(2000).
- 양천수,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부패의 개념, 정당화 근거 및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제11권 제4호(2006. 12).
- 엄순영,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 프란츠 노이만과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5
-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적 정의”, 『법과 사회』 제5권(1992).
-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 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6.
- 이상돈 · 전현욱, “정보이용동의 -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 『고려법학』 제47호(2006).
-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민주주의 이론적 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05.
- 최진욱,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7.
- 로렌스 레식, 김정오 역,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5.
- 허버트 하트,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 J. L. Harrison, 명순구 역,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 I. Saenger, 김규완 역, “도처에 소비자”, 『고려법학』 제46호(2006).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1990.

37) J. Habermas, 앞의 책(주3), S. 399 ff.

-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2. Aufl., Frankfurt/M. 1994.
- G. Teubner, *Altera Pars Audiatur: Das Recht in der Kollision anderer Universalitätsanspruch*, in: *ARSP*, Beiheft 65 (1996).
- G. Teubner, *Globale Zivilverfassungen: Alternativen zur staatszentrierten Verfassungstheorie*, i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63 (2003).
- A. Fischer-Lescano/G. Teubner, *Regime-Kollisionen*, Frankfurt/M. 2006.
- Yang, *Konzeption einer intersubjektiven Rechtsgutslehre*, Diss. Frankfurt/M. 2006.

김지훈 · 김세영 기자,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2007. 05. 09) (수) 오후 3:33.

저자약력: 저자 양친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영남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부패의 개념, 정당화 근거 및 정책”, “법존재론과 형법상 행위론”, “법문화와 처벌불가능성” 등이 있다.